

중국에 거는 기대와 그 한계

홍 우택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3-07

미망에 가까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마치 중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앞에 두고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결국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놓고 유엔 안보리는 중국의 동의하에 예전의 강도보다 센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결의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한다. 근래 들어 중국 내부에서 반북여론이 들끓고 또 중국 공산당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을 한 예를 들면서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표면에 드러난 북·중관계의 실태를 보면 중국의 지렛대는 분명해 보인다. 일례로 북한은 70~80%의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무상으로 석유와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중국에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국의 지렛대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 하원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서 경제원조·무역축소 등의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였다. 같은 달 15일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가 미국도 북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중국이 참여하였을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

들은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북한을 비핵화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중국이야말로 유일한 국가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갖고 있질 않다. 앞 뒤 사정을 짚어보고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라는 중국의 역할과 중국이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대북제재의 종류들은 북한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들이다. 그쯤 되는 수준의 제재강도여야만 북한이 꿈쩍이라도 할 것이라고 여기기에 고안된 조치들이다. 그래서 제재가 장기간 이어지더라도 하면 북한의 붕괴로까지 변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

짐작컨대 중국은 그러한 제재에 동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의 불안정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최대이익은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유지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북한이 붕괴하여 대규모 난민이 자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부담을 중국은 원치 않는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행태는 언제나 예측 가능했다.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항상 실질적인 대북제재에는 소홀하거나 반대를 하여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공급하여 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대북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도 짐작할 만하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동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다. 장톈젠 초대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우선순위는 1위가 한반도 안정, 2위가 중국과 북한의 우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소집된 중국의 외사영도소조에서는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며,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는 분리하여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북한체제의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진데 중국이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제재에 협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허망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생각이 바뀌는 조건을 들고 있다. 만일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대북정책을 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들을 한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 가능성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기로 본다. 사실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핵보유국 일본이 실질적인 위협일 수 있다. 스티브 셔벳 신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장은 지난 15일 한국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 여론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것을 중국은 안다. 많은 미국의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에서 발표한 국정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을 알 수 있다. 오바마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을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동맹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북한의 위협에 처한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를 강화할 것이며, 핵물질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북한정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다. 혹자들은 이것을 중국의 딜레마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딜레마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행동에 한쪽 눈을 감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마치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장으로 중동의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었다고 여기질 않는 것처럼 중국은 북한을 그렇게 본다.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적어도 핵실험이나 핵무장을 빌미로 자신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중국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중국이 자신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동한다.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행동반경이 보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한국이나 일본의 행동반경도 눈에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에 한발을 빼도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행동을 우리가 촉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무모한 기대를 접고 냉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행동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기대수준을 낮춰, 북한의 핵포기나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이 아니라, 핵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품목의 반입금지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협력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한적인 협력이 한·중 간 신뢰를 쌓고 그것이 누적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